

金融改革 推進現況과 主要 改革課題 推進方向

—通貨信用政策 效率化 및 銀行所有構造 改善方案을 中心으로

林 昌 烈

自律化·開放化·國際化로 요약될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속에서 우리 金融產業이 제조업 등 실물부문이나 외국 금융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개방화·국제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서도 이제까지의 개방화·자유화의 속도를 가속시켜 우리 금융산업의 競爭力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 된 것이다. 制度改革의 목적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므로, 金融改革의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점을 최대한 살려나가기 위해 타부문의 연계성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經濟·社會全般的인 여건이 동시에 성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당국, 금융기관, 가계와 기업, 연구소와 학계 등 전문가그룹 등의 共同努力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金融改革 推進現況

1.1. 金融改革 推進背景

自律化·開放化·國際化로 요약될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금융산업은 제조업 등 실물부문이나 外國 金融產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동안 60년대 이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經濟成長에 필요한 자본축적이 미미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원의 배분에 간여하여 국가 전략산업과 中小企業·農水畜産部門 등 취약부문에 대해 자금을 중점 지원해 왔으며 이 결과 우리 경제가 단기간내에 고도성장을 이루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金融產業에 있어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企業性과 自律性이 어느 정도 희생되었으며 이러한 요인이 金融產業의 發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측면이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급속한 經濟開發過程에서 經濟規模가 커지고 경제구조도 복잡 다기화하면서 1980년대 들어서는 經濟運用基調를 민간주도형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맞추어 金融部門에서도 市中銀行 民營化, 內部經營 自律化, 實績配當金融商品 導入, 부분적인 金利自由化 實施 등 지속적으로 금융자율화 노력을 추진해 온 바 있다. ⁽¹⁾

이러한 노력에 의해 金融部門의 自律化가 상당한 정도 진행되면서 금융기관경영이 자율화 되고 金融市場에서 금리의 價格機能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등 우리 금융이 처해있는 현실 여건하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왔다고 본다.

이런 바탕위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經濟의 開放化·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經濟의 중장기적인 成長潛在力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서도 이제까지의 開放化·自律化 속도를 가속시키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 된 것이다.

더구나 우리 경제가 소규모 開放經濟인 點(small open economy)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필요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 하겠다.

1.2. 金融改革의 推進現況

1.2.1. 金融改革의 主要內容

이같은 金融改革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해에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金融產業發展審議會, 韓國銀行, KDI 등 여러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천가능한 金融改革 방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마련된 부문별 主要內容의 基本方向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금융개혁의 출발점이자 핵심적인 과제인 金利自由化를 통해 금리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고, 人事·店舖·增資·配當 등 금융기관의 내부경영 자율화를 추진하여 경영을 활성화하고 자율화에 따른 責任經營體制를 확립해 나가도록 한다.

둘째, 金融自律化 課題中 그 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정책금융의 축소, 부실채권의 정리, 금융기관에 대한 각종 여신규제의 완화 등을 과감히 추진하여 金融機關의 資金運用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通貨管理에 있어서는 직접규제방식을 지양하고 간접규제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반 정책적 노력을 가속화함으로써 金融環境變化에 맞추어 通貨運用의 效率性을 제고해 나간다.

(1)

〈1990년대중의 金利자유화 추진현황〉

- | | |
|-------------------------------|--------------------------|
| 1981년 ○시장실세금리 조건의 CP도입 | ○은행대출금리의 밴드제 도입 |
| ○Call금리자유화 | ○무보증 회사채 발행금리 자유화 |
| ○CD제도 도입 | |
| 1985년 ○은행에 자유저축예금 도입 | ○CMA 및 가계금전신탁 도입(실적배당상품) |
| 1986년 ○회사채, 금융채 및 CD발행금리 자유화 | |
| 1987년 ○BMF, 기업금전신탁 도입(실적배당상품) | |
| 1988년 ○모든 대출금리 및 2년이상 수신금리자유화 | |

넷째, 金融自律化와 더불어 금융산업내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金融監督機能을 강화하여 건전한 金融慣行을 정착시켜 나간다.

다섯째, 金融機關의 專門化와 大型化를 유도하고 업무영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金融機關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所有構造 개선등을 통하여 금융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여섯째, 대외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편익증진과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外換 및 資本市場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와 같은 내용은 금융 각 부문을 망라하여 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것으로 상호관련성이 크고 金融產業과 實物經濟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5년에 걸친 단계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계획한 바 있다.

1.2.2. 金融改革 推進現況

신정부 출범과 함께 이같은 금융개혁 청사진이 제시된 이후 동계획 추진 초기인 지난해와 금년에는 金融實名制, 金利自由化, 政策金融 縮小·整備 등과 같이 금융운용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제도와 개혁을 중심으로 金融改革計劃을 추진해 왔는 바 그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3년 8월 12일부터 金融去來實名制度를 도입한 이래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경제활동과 생활관습 속에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政策的 努力을 지속해 왔다. 가계수표등 지급결제제도 개선, 영세중소상공인의 제도금융권 이용편의 제고 등 금융면에서 각종 보완대책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²⁾ 있는 한편, 金融去來 秘密保障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둘째, 金融機關 資金運用과 經營 등에 관한 규제완화등을 통하여 금융자율화를 대폭 확대해 왔다. 1993년 11월에 2단계 금리자유화를 실시함으로써 대부분의 金融기관 與信金利를 자유화하여⁽³⁾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왔다. 한편 금년 7월에는 3段階 金利自由化 일부를 조기에 추진하여 양도성 예금증서와 기업어음 등과 같은 短期市場性 商品에 대한 자

(2)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사금융위축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자금지원 및 신용보증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상의 애로를 해소한 바 있으며, 특히 사금융시장 위축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관리기금의 금고에 대한 어음제매입 한도 확대(1,200억원→2,400억원), 금고 여수신 금리의 1.0~1.5%p 상향조정, 금고의 어음할인대상에 용통어음 포함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가계수표이용 활성화를 위해 장당 발행한도를 확대(개인 50→100만원, 법인 200→500만원)하고, 우량고객에 대한 은행의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한 바 있다.

(3) 1993년 11월에 실시된 2단계 금리자유화에서는 여신금리는 대부분 자유화하여 실질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여신금리상승압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도록 수신금리는 상대적으로 소폭 자유화 하였다. 또한 3,4단계에 예정되어 있던 통화채·국공채 등의 발행금리를 앞당겨 실시화하여 금리자유화의 실효성을 제고한 바 있다.

유화폭을 확대하여⁽⁴⁾ 金融市場의 仲介機能을 활성화해 오고 있다. 또한 여신금지부문이 나 제조업 대출비율등 선별적 금융규제도 완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을 자율화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銀行長推薦委員會制度’를 도입하여 자율적인 인사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점포 설치·배당 등을 자율화 하면서 경영성과에 연계시켜 金融機關 스스로 경영합리화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金融機關의 內部經營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왔다.

한편 金融自律化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금운용자율화를 위하여 은행이 상업성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政策金融을 단계적으로 축소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韓國銀行의 한시적인 정책금융제도에 대해서는 시한이 만료되는 대로 폐지 정리하고⁽⁵⁾, 신규지원실적이 없는 資金支援制度는 기한이 도래되는 대로 회수하고 있으며⁽⁶⁾, 다만 農漁村·中小企業支援 등을 위한 정책금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융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⁷⁾ 이와 함께 11~30大 系列企業의 기업투자 및 부동산

〈2단계 금리자유화 대상〉

區 分	自由化 對象	自由化 比率*
○여 신	• 재정지원 및 한은제한대상 대출을 제외한 모든 여신	은행 68% (9%) 비은행 100% (28%) 계 84% (19%)
○수 신	• 제1·2금융권 2년이상 장기수신 (적립식의 경우 3년이상)	은행 40% (15%) 비은행 64% (52%) 계 57% (41%)
○채 권	• 만기 2년미만 회사채, 금융채 발행금리 자유화 • 통화채와 국공채 발행금리 실세화	

* 1993. 6월 누계기준, ()내는 1단계 자유화 비율

(4) 1994. 7에 실시한 단기지장성 상품의 발행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3단계 금리자유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발행기간 : 91일~270일 → 60일~270일

CP 발행기간 : 91일~180일 → 60일~270일

RP 발행기간 : 91일 이상 → 60일 이상

(5) 한시적인 정책금융의 운용종료로는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수출산업설비자금 취급분의 한국은행 재할인(20%) 지원중단(1993. 6말), 재할인대상 상업어음의 만기연장 잠정조치(90→120일)의 환원(1993. 9말), 은행의 무역어음할인분에 대한 한국은행 B₁ 자금(20%) 지원중단(1993. 12말) 등을 들 수 있다.

(6) 신규지원이 없어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회수하는 자금으로는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방위산업자금, 산업구조조정자금 등이 있다.

(7) 정책자금의 재정전환을 위해 1994년 예산에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 3,260억원, 농수축산자금 2,488억원이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다.

취득에 대하여 主去來銀行의 승인을 받도록 해 온 제도를 폐지하여 金融機關과 企業의 經營環境을 개선해 오고 있다.

셋째, 金融市場에 대한 예측성과 안정성이 제고되도록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오면서 銀行信託과 投資信託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완화, 금융기관에 개인연금신탁제도 도입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취급기관 확대 등 金融商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⁸⁾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金融產業의 競爭力이 강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오고 있다.

넷째, 경제주체들의 국제화를 뒷받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外換 및 資本去來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기술도입 경비지급등과 관련된 經常 外換去來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면서 지급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오고 있으며 外換集中制도 완화해 오고 있다.⁽⁹⁾ 또한 일반 투자가의 海外證券直接投資를 허용하고,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해외증권투자를 자유화 하는 등 資本去來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의 수용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이러한 金融改革은 별다른 부작용없이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우선 金融實名制등 그 동안 미루어왔던 개혁과제를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개혁의지에 대한 높은 신뢰감이 형성된데다, 개혁 청사진을 사전에 제시함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이 미리 대비하고 예측할 수 있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實物經濟가 회복세를 지속해 온 것도 개혁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金融改革의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경영혁신 노력이 가속화되고 人事自律化와 政策金融縮小 등으로 책임경영의식이 크게 높아지는 등 金融產業全般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은행신탁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의 통화채 의무비율(수탁고의 30%이상 운용) 폐지, 동일종목 유가증권에 대한 수탁고의 10%초과 매입 또는 소유제한 폐지(단 주식은 제외) 등을 시행하였고, 투자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10%제한을 완화하여 國채·지방채·통안증권 및 정부투자기관 발행채권에 대해 신탁 재산의 30%까지 투자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신탁재산투자 유가증권의 범위를 상장유가증권에서 단기금융자산, 외화증권에 까지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또한 1994. 6. 15을 기하여 한국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해 오던 장기주택마련저축제도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을 제외한 전은행에까지 확대 시행하였다.

(9) 외화집중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개인의 외화소지를 자유화하고 기업의 해외에서의 외화보유를 최고 1억불에서 3억불까지 확대하였다.

2. 向後 金融改革 推進方向

2.1. 基本方向

그 동안 추진해 온 金融實名制, 金利自由化 등 금융개혁의 근간이 되는 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므로 변화하는 金融環境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는 전반적인 金融改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改革課題를 조기에 마무리 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과제에 대하여도 經濟與件등을 재점검하여 조기에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金融產業이 세계적인 금융환경변화 추세에 적응해 나가면서 1995년에 출범할 WTO 체제나 1996년에 예정된 OECD 가입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金融改革의 속도를 보다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OECD 가입전인 1995년말까지 대부분의 金融改革課題를 본격 추진하고, 1996~97년 중에는 나머지 금융개혁작업을 마무리하여 金融產業의 先進化 基盤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년은 경기회복이 본격화되고 있어 金融改革推進에 따른 副作用등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主要 改革課題를 가급적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 생각한다.

2.2. 部門別 推進方向

2.2.1. 金融自律化的 持續的 推進

金融自律化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조기에 추진하여 金融產業에 시장경쟁인리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實物經濟與件과 金融市場動向을 보아가면서 수신금리 자유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3段階 金利自由化 推進時期를 가급적 앞당기도록 해 나갈 것이며, 실물경제 동향과 금융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그 추진 대상범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¹⁰⁾

한편, 이같은 3段階 金利自由化的 조기추진등으로 금융시장에서 금리의 가격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므로 이에 맞추어 通貨管理方式에 있어서도 間接規制管理方式을 실질적으

(10) 2단계 자유화 대상중 아직 시행하지 않은 부분으로는 여신의 경우 한국은행제할인대상등이 포함되는 정책자금 대출금리, 수신외의 경우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제1·2금융권의 2년미만 수신금리(적립식의 경우는 3년 미만)등이다.

로 정착시켜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는 金融市場 開放擴大등 통화관리 여건변화에 맞추어 通貨・金利・換率間의 조화있는 연계운용(policy mix)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金融機關의 資金運用自律性を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 중소기업・농어촌 등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금융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여 金融機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다.

또한 金融自律化와 國內 金融産業 競爭力 強化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은행등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규부실채권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경영상태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不實債券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金融機關 스스로가 경영결과에 책임을 지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같은 금융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金融機關間 競爭이 激化되어 경영이 부실화 되는 경우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당국에서는 이를 위해 金融監督機能을 강화하면서 예금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預金保險制度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

2.2.2. 金融産業의 競爭力 強化 推進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國內 金融機關들이 질 높은 서비스 공급을 통해 외국의 우수 금융기관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金融機關의 業務基盤을 확충하고 構造改編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방편의 하나로 점진적으로 은행의 증자를 자율화하는 한편 非公開金融機關의 공개를 적극 추진하여 金融機關의 大型化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부 투자금융회사를 종합금융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맞추어 金融機關間 業務領域 調整問題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2.2.3. 外換 및 資本去來를 先進國 水準으로 自由化

신정부 출범이후 외환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무역 등 經常去來部門에서는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自由化가 진전되었고, 資本去來側面에서도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海外에서 直接調達하는 현지금융 등을 중심으로 상당수준 자유화 되어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금융적 동기에 따른 자본유출입을 수반하여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資本去來自由化를 순조롭게 추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률이 높고 국내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아 內外金利差 등에 따른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될 유인이 크므로 外國등으로부터의 資本開放壓力도 상대적으로 큰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해외자본의 과다한 국내유입은 통화증발에 따른 物價上昇이나 換率切上으로 이어져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外貨流入을 수반하는 資本去來自由化는 예상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여건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동시에 資本의 海外輸出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外換 및 資本去來自由化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中長期 外換制度改革方案⁽¹¹⁾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金融改革課題를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추진할 계획인바, 본고에서는 전반적인 金融自律化 추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通貨管理方式를 중심으로 하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화방안과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銀行의 所有構造改善을 중심으로 보다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3. 通貨信用政策의 效率化

金融의 自律化 및 開放化가 진전되고 資本去來의 自由化가 심화되면서 金融市場의 주요 변수들과 巨視經濟變數간에 과거의 안정적인 관계가 불안정해 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諸般金融政策을 추진하는 데 있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특히 기존의 通貨信用政策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여건하에서 通貨信用政策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이나 우선 通貨管理의 中立性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통화관리의 중립성유지를 위해서는 通貨當局이 통화량위주의 통화관리를 통한 선별적 정책운용이나 직접규제보다 시장의 가격기능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間接規制方式에 의한 通貨管理體系를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더구나 間接管理方式에 의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은 外換 및 資本自由化로 해외자본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여건하에서 전반적인 巨視經濟變數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3.1. 間接通貨管理方式의 定着

(11)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외의 외환개혁소위에서 외환제도개혁 방안을 작성하여 1994.9.8에 공청회를 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작성하여 금년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3.1.1. 心要性

1982년에 은행별 國內與信限度管理制度를 폐지하고 지급준비금 조정등을 통한 通貨管理方式으로 전환을 시도한 이래 間接規制方式의 정착노력을 지속해왔다.

國內與信限度管理制度와 같은 직접관리수단은 특정금리하에서 총신용을 일정수준에 유지시키는 경우에서와 같이 특정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관리방식은 市場原理와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종 規制回避活動을 야기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할수록 通貨管理手段으로서 효과적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효율적인 資源配分을 阻害하는 부작용도 야기하였다.

이같은 直接管理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金融自律化 추세에 맞추어 시장원리에 의한 금융운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公開市場操作, 再割引政策, 支準政策 등과 같은 정통적인 通貨政策手段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間接調節方式에 의한 通貨管理體制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금리의 가격기능을 활성화하고 통화관리상의 구조적인 제약요인을 해소해 나가면서 이와 함께 정통적 通貨政策手段의 유동성조절기능을 회복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각 수단별 구체적인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2. 中央銀行 貸出制度 改善方案

(1) 現況 및 問題點

中央銀行 貸出制度가 유동성조절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최종공급자로서 季節的 資金需要 및 個別金融機關의 일시적인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資金供與手段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그 동안 중앙은행 대출제도를 경제개발을 위한 특정 부문에의 지원이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을 중심으로 운용해 왔다.

이것이 그 동안 정책금융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銀行에 정책자금 취급에 대한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個別銀行의 特定資金 取扱 實績의 일 정비율 해당액을 상대적으로 낮은 金利로 자동적으로 지원해왔던 것이다.⁽¹²⁾

이같은 자동대출방식의 제한인제도 운용으로 中央銀行의 본원통화공급구조가 경직화되어 본원통화가 經濟規模에 비해 過多供給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通貨當局은 과잉유동성에 따른 物價上昇要因을 최소화하기 위해 RP규제, 통

(12) 상업어음할인에 대해서는 할인금액의 50~70%를, 무역금융에 대해서는 취급액의 30~50%를 낮은 금리(5%)의 한은자금으로 자동지원 해 주었다.

화안증권발행 등의 공개시장조작과 높은 支給準備率을 유지해야 했고 이는 결국 이들 通貨管理手段의 유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改善方向

金融改革計劃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韓國銀行貸出制度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政策金融 縮小・整備方案(1993. 11)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政策金融은 그 동안 脆弱部門에 대한 支援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기여를 해 왔으나, 금융의 自律性和 效率性を 제약하고 간접관리방식의 통화운용에 큰 장애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등을 감안하여 금융개혁 5개년 계획에서는 金融의 自律化・開放化 趨勢에 맞추어, 이를 축소・정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 主要内容은 우선 한시적인 政策金融制度는 시한이 되면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 新規 支援이 되지 않고 있는 기존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農水 畜産資金이나 中小企業 支援資金 등과 같이 취약부문을 지원함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政策金融은 재정지원으로 전환하여 金融部門의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韓國銀行의 再割引 및 貸出制度를 정비하여 1994년 3월부터 기존의 자동재할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재할인등 한국은행의 대출을 받는 總額貸出限度制로 전환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3월부터 商業어음割引 및 貿易金融 등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동재할인제도를 폐지하고 總額貸出限度制로 전환하였으나 우선 금년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選別金融機能이 약화되지 않도록 중전의 再割引規模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도록 總額限度를 설정하여 운용해 오고 있다.⁽¹³⁾

또한 통화당국에서 總額限度등을 분기별로 사전에 예시함으로써 通貨當局의 정책방향을 전달하는 신호(signal)로 활용하는 동시에 資金需給管理에 있어 個別銀行의 豫測可能性을 제고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아직도 산업정책적 측면이 상당부분 고려되어 총액대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향후 3段階 金利自由化 施行으로 재할인대상 정책자금 대출금리가 자유화될 경우 총액대출제도의 유동성조절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즉 금리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總額貸出限度는 현재의 産業政策의인 측면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通貨供給目標, 市中流動性事情 및 계절적 資金需要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유동성 조절기능이 점차 제고되게 될 것이다.

(13) 1994년중의 총액대출한도 운용현황을 보면 시행초월인 3월에는 88,000억원, 2/4분기 중에는 93,000억원, 3/4분기 중에는 92,000억원, 4/4분기 중에는 95,000억원으로 운용해 오고 있다.

한편 韓國銀行 貸出制度의 유동성조절기능 제고와 함께 再割引金利와 市場金利間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재할인금리가 銀行貸出金利 決定을 위한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할인금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韓銀 貸出金利의 신속적 운영이 가능하면 통화당국은 재할금리조정을 통하여 당국의 정책방향을 金融市場에 전달하는 공시효과(announcement effect)를 적극 활용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金融機關의 자금운용행태에 있어서 조달범위내 자금운용 관행이 확립되고 모든 금리가 자유화되어 金融自律性이 크게 제고되는 단계에서는 韓國銀行 貸出制度는 자금의 최종공급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 季節的 資金需要 및 個別 金融機關의 일시적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자금공여수단을 중심으로 운용되어질 것이다.

3.1.3. 支給準備率制度 改善方案

(1) 現況 및 問題點

金融市場을 활성화시키고 유동성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支給準備金 水準이 적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必要支給準備率이 適正水準으로 유지되어야만 금융기관이 지급준비금 유치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과감한 罰則金利를 적용하는 등으로 통화당국의 절도있는 通貨管理가 가능할 것이며, 또한 支給準備金管理를 절도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金融市場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金融自由化 推進時에 많은 국가들이 법정기준을 상당폭 인하한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中央銀行貸出制度등을 감안하여 제로법정기준율제도를 채택한 바 있으며 대부분 국가의 경우에도 法定支給準備率 수준을 크게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⁴⁾

〈表 1〉 豫金支給準備率 變動推移

(%)

	1984. 9. 8	1987. 11. 23	1988. 12. 23	1990. 2. 8
요구불예금등 기타예금	4.5	7.0	10.0	11.5
2년이상 정기예·적금 가계 우대정기적금	4.5	7.0	8.0	8.0
목돈마련저축등 ¹⁾	3.0	3.0	3.0	3.0

註 : 1) 목돈마련저축(1976. 4. 1), 근로자주택마련저축(1987. 12), 주택부금(1988. 12. 23), 근로자장기저축(1991. 1. 17), 상호부금(1991. 2. 8).

(14) 한국의 경우 기준율이 3.0~11.5%인 데 비해 미국은 3~10%, 독일은 2~5%, 일본은 0.05~1.20%, 대만은 8.125~26.25% 수준에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自動再割引方式 등에 의해 본원통화가 과도하게 공급되어 이를 수축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支給準備率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980년대 후반 國際收支黑字에 따른 과잉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지급준비율이 큰폭인상조정된 후 國際收支가 赤字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에서 고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동성 조절수단으로서의 支給準備率政策의 탄력적인 운용이 제약되고 있는 형편이다.

(2) 改善方向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中央銀行의 自動再割引方式 등에 의해 본원통화가 과도하게 공급되어 있어 지급준비율을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支給準備率 問題는 中央銀行의 대출제도 개선 추이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즉 政策金融이 점차 축소되어 본원통화공급이 적정수준에 달하게 되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1.4. 公開市場操作의 活性化 方案

(1) 現況 및 問題點

公開市場操作은 間接通貨管理를 위한 가장 신속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수단으로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잘 발달된 短期金融市場이 형성되어야 하고, 채권이 실제 금리로 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金融市場을 보면 최근 금리자유화등으로 金融仲介機能이 다소 활성화되어 채권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公開市場操作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第2段階 金利自由化時에 通貨債 및 國公債 發行金利의 실세화를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公開市場操作與件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채를 완전히 시장실세금리로 발행하고 있으며 通貨安定證券 發行 및 RP 去來도 公開競争入札方式로 발행되는 규모를 점차 확대하여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¹⁵⁾

다만 通貨安定證券 발행 및 RP거래의 競争入札金利가 아직 시장금리에 비해 다소 낮지만

(15) <通貨安定證券 및 RP의 競争入札規模 推移>
(해당월 발행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4. 3	1994. 6	1994. 8
• 통화안정증권	52.3%	91.9%	99.8%
• R P	40.2%	64.0%	41.9%

〈表 2〉 通安證券 收益率 및 發行物量

(364일물 기준, %p, 억원)

	1991달	1992달	1993달	1994. 3달	6달	8달
발행수익률(A)	13.00	12.75	11.90	11.80	11.80	12.00
유통수익률(B)	18.00	14.40	12.00	12.20	12.10	12.20
(B-A)	5.00	1.65	0.10	0.40	0.30	0.20
발행잔액	134,965	202,640	242,018	254,294	240,156	223,257

이는 앞으로 통화채규모 감소추이 등에 따라 점차 市場金利水準으로 완전히 조정되어질 것이다.

通貨債등의 발행금리가 아직도 다소 낮은 이유는 그 동안 과도하게 공급되어 온 본원통화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발행된 通貨債規模가 상대적으로 큰 데에 있다. 즉 매월 2조 원 수준이 만기가 도래되고 있어 이를 시장기능에 의해 무리없이 소화하기에는 發行機關의 利子負擔등이 다소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2) 公開市場操作 活性化 方向

公開市場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債券市場基盤을 확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國債發行主體의 단일화와 조건표준화 등을 통하여 국공채시장을 整備・發展시켜 나가는 한편 銀行・保險社에 국공채 창구판매업무를 허용하여 국공채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채권시장의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 債券收益率 즉시 公示體制를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通貨債등을 완전실세금리로 발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通貨債 發行金利를 완전실세로 발행하려면 本源通貨供給規模가 적정수준에 달하는 등 주변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가급적 조속히 실세금리와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3.1.5. 通貨目標運用 改善

金融自律化 및 金融革新의 진전은 금융상품간, 금융권간 불규칙한 금융자산이동으로 통화개념을 모호하게 하고 통화유통속도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通貨信用政策의 유효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中心通貨指標의 目標設定과 運營方式의 개선을 통해 通貨管理의 신축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年間 通貨供給目標設定時 범위(range)를 보다 확대하여 설정함으로써 金融市場의 不安定性을 어느 정도 흡수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즉 범위

(range)를 보다 넓게 설정한 후 實物經濟與件, 金融市場動向 등을 보아가면서 통화를 보다 신속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中長期的인 면에서 中心通貨指標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市中流動性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中心通貨指標의 개선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등을 감안하여 현 여건에서는 우선 증심지표 이외에 다양한 補助指標를 활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通貨當局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통화관리지표로서 M_2 지표 이외에 M_1 , M_2+CD , M_2A , M_2B , M_3 등 여러 보조지표를 같이 보아가면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가고 있다.

3.2. 開放化時代에 對應한 通貨政策運用

3.2.1. 通貨·金利·換率間 連繫運用 必要性

金融自律化, 外換 및 資本自由化에 따라 환율변동폭이 커지고 해외자본 이동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通貨와 實物經濟의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通貨量, 金利, 換率 등 정책변수가 상호 크게 영향을 미치는 등 金融市場의 변화요인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하에서 通貨信用政策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通貨, 金利, 換率 등 정책변수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하여 財政·金融·外換 등의 정책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3.2.2. 通貨·金利·換率의 連繫運用

資本自由化등에 따라 외화유출입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 가격변수간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내외금리차등 여러 요인에 의해 외자가 유입되면 “換率切上” 또는 “通貨增加·金利下落”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외자가 유입되는 상황에서 通貨當局이 外換市場에 介入하여 통화의 추가적인 공급을 통해 외화를 매입하게 되면 換率은 中立的이 될 것이나, 通貨는 增加될 것이다.

반면 通貨當局이 外換市場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通貨는 中立的이지만 換率이 切上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외자유입이 되는 경우 政策對應方向에 따라 “換率”과 “通貨” 간의 선택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短期的으로 通貨增加率을 일정수준에서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외자유입시 中央銀行이 市場介入을 하여 외자를 흡수함으로써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통화증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가된 통화를 흡수해야 하는바 이 경우 通貨債등을 發行할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반면 外

換市場 介入을 줄여 환율절상을 허용하게 되면 金利上昇壓力이 다소 해소될 것이므로 金利와 換率間 선택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개방경제하에서는 通貨・金利・換率間 상호연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開放化・國際化된 금융여건하에서 이처럼 상호연관성이 있는 通貨・換率・金利間 적정한 연계운용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여건등에 따른 政策 優先順位의 선택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政策目標은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하게 될 것이나 財政金融政策에서는 일반적으로 物價安定, 經濟成長, 國際收支均衡 등이 주요 정책과제이다.

이들 政策目標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들 과제는 經濟與件에 따라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經濟與件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결합(policy-mix)을 위하여 政策優先順位를 어느 정도 설정하여 두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金利・換率・物價水準 등을 감안하여 通貨・金利・換率政策을 연계운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銀行의 所有構造 改善

4.1. 現況과 問題點

銀行에 대한 所有構造를 살펴보면 1992년 5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동일인 범위를 公正去來法上的 同一人으로 확대하고 1995년 5월까지 소유한도(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8%)를 초과하는 株式을 정리토록 조치하였다.

地方銀行에 대해서도 동일인 소유지분한도를 15%로 신규로 설정하여 20~25%를 소유하고 있던 地方銀行의 大株主의 所有株式을 1995년 5월까지 정리토록 조치한 바 있다.

이처럼 銀行에 대한 所有持分限度를 운용하고 있지만 金融自律化가 진전됨에 따라 金融機關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축소되면서 과점주주인 大企業 系列의 銀行經營參與가 상대적으로 증대되어 대기업계열의 銀行經營支配 우려가 검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銀行의 경우, 8%의 소유한도를 두고 있으나, 產業資本들이 서로 연계할 경우 銀行을 支配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현 所有構造로서는 안정된 經營主體의 형성도 어려워 責任經營이 확립되지 못하여 經營效率과 競爭力 確保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金融機關의 所有構造問題는 산업재벌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를 인정할 경우 經濟力 集中問題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점과 주인이 있는 金融機關 育成을 통하여 經營效率性

을 제고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이다.

4.2. 改善方向

4.2.1. 新경제 5個年計劃上 推進 基本方向

銀行所有構造問題는 무엇보다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私金庫化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大株主에 의한 金融機關支配를 제한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金融機關 經營의 효율성 측면과 소유주식의 매각이 株式市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大株主와 金融機關間의 人事・資金 등의 면에서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資金 흐름 遮斷裝置를 강화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차단장치의 유효성을 면밀히 점검한 후 필요할 경우 단계적으로 大株主의 金融機關 所有限度를 낮추어 갈 계획이다.

다만 大株主의 金融機關 支配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되기 쉬운 金融機關 經營의 效率性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金融專業企業家등을 育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이같은 基本方向에 맞추어 金融產業發展審議會, 研究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銀行의 所有構造 改善方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2.2. 銀行所有構造 改善方向

(1) 基本方向

현행 8%의 동일인 所有持分限度를 4%까지 하향조정하여 소유분산을 통한 金融機關의 私金庫化를 방지하는 한편, 순수 금융자본(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서는 12%까지 예외를 인정하여 과점대주주의 출현이 가능케 함으로써 경영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길을 터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 金融市場內에서 다양한 형태의 所有構造와 經營體制를 갖는 銀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바람직한 責任經營體制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 同一人 所有持分限度의 下向調整

소유분산을 통해 은행의 私金庫化를 방지하고 금융의 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特定株主가 상법상에 주어진 주주총회 소집권, 임원의 해임 청구권 등 이른바 “少數株主權”(5%이상 보유시)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同一人 所有持分 限度를 현재의 8%에서 4%로 축소할 계획이다. 다만, 證市安定基金등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機關投資家에 대해서는 현행(8%) 유지하도록 하되 이들 例外認定 機關投資家の 의결권 행사는 4%로 제한하여 타주주와의 형평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예외인정 機關投資家로는 證市安定基金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管理・運用하

는 법인으로서 財務部長官이 정하는 去來, 法律에 의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財務部長官이 정하는 법인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制度改善에 따른 개정은행법 시행일 현재 4% 초과지분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처분 유예기간을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所有持分限度 축소 의의가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改正銀行法 施行日 현재 4% 초과지분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금번 所有構造改善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 猶豫期間동안 의결권행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3) 金融專業企業家에 대한 所有持分限度上的 例外認定

金融專業企業家の 同一人 所有持分限度를 12%로 하여 4%초과~12%이하의 지분을 가지도록 하여 전체적인 所有構造가 체계적이고(원칙 4%, 증안기금 등 8%, 금융전업 기업이 12% 등), 특정인의 銀行支配에 따른 폐해를 완충할 수 있는 과점대주주 체제로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金融專業家 本人은 이 중 2/3이상을 보유토록 함으로써 동일인 집단(특수관계인 등 포함 12%까지 소유가능) 중에서 金融專業企業家 본인이 대표성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4) 適用對象 및 推進日程

銀行法에 의해 설립된 一般銀行을 원칙으로 하되 地方銀行, 合作銀行, 金融機關의 合併 및 轉換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환은행,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전국은행과는 달리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설립초기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支配株主의 存在를 인정하여 왔으나 金融專業企業家制度를 적용할 실익이 없으며, 사정변경을 이유로 동일인 所有持分限度를 4%로 낮춰 지배주주의 주주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財產權 侵害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合作銀行은 현재에도 외국인 대주주의 經營權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外國人持分率이 8%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인에 대해서 지분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 이복 5도민, 서민, 중소기업, 주택공급 등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金融支援을 목적으로 설립된 銀行에 대해서는 支配株主의 地位로 사기업화되면 당초 設立目的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이같은 銀行所有構造改善 方向은 앞으로도 金融產業發展審議會, 關係部處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완한 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5. 結 語

開放化・自律化로 대변할 수 있는 세계금융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는 金融改革을 가속화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같은 金融制度改革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제도개혁의 목적이 안정적인 巨視經濟與件을 造成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金融改革課題 推進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점을 최대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타부문과의 연관성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金融改革自體만을 위해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졸속히 추진할 경우에는 거시경제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상실등으로 자칫 정책조정능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金融改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經濟・社會全般的인 여건이 동시에 성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당국, 금융기관, 기업 등 공동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변여건을 조성하는 과제는 당국과 금융기관의 노력 이외에도 이를 이용하는 家計와 企業, 그리고 研究・分析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소,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의 전반적인 공동노력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된다.

財務部 第1次官補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 (02) 503-9203

팩시 : (02) 503-9324

參 考 文 獻

- 徐秉翰(1993)：“시장원리에 의한 간접관리체제로의 전환：전제조건과 여건개선방안,” 『금융경제연구』 7,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財務部(1993)：“신경제 5개년 계획：금융개혁부문,” 재무부.
- _____ (1994a)：“금융기관(은행) 소유구조 개선방안：금융전업자본도입방안을 중심으로,” 공청회 토론회자료.
- _____ (1994b)：“은행의 소유구조개선 방안,” 재무부.
- 鄭健容(1987)：“우리 나라 금융정책 운용현황과 개선방향：실제운용행태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趙潤濟(1993)：“금리자유화와 정책금융의 방향에 관하여,” 『금융경제연구』 53,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 趙潤濟·朴宗奎(1994)：“개방경제하의 재정정책：거시경제조정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左承喜(1993)：“통화관리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금융포커스』.
- 崔長鳳(1993)：“통화의 간접관리수단으로서 통화안정증권의 역할,” 한국조세연구원.
- _____ (1994)：“개방경제하의 금융정책：1990년대 후반기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 韓國銀行(1993)：“한국은행대출제도 개선 및 총액한도 설정,” 자금부.
- 威貞稿·徐秉翰·金玄儀(1994)：“금융자유화의 진전과 통화정책,”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